2027

예산안 토론회

2026. 11. 2. 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

예산안 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

예산안 토론회

2026. 11. 2. 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진행순서 PROGRAM

개회식 14:00-14:15

개 회 사	이 신 우	국회예산정책처장
격 려 사	조 정 식	국회의장
축 사	이 광 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제 및 토론 14:15-16:00

좌 장	하 연 섭	연세대학교 교수
발 제	김 명 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임 명 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토 론	정 태 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 상 범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 정 혁	홍익대학교 교수
	김 대 종	세종대학교 교수

2027

예산안 토론회

2026. 11. 2. 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목차 CONTENTS

개 회 사 **이 신 우** 국회예산정책처장 ····· 7

격 려 사 **조 정 식** 국회의장 ····· 9

축 사 **이 광 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 11

발 제 1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김 명 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 17

발 제 2 **2027년도 예산안 주요 분석 내용**

임 명 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 35

토 론 **정 태 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65

유 상 범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75

이 정 혁 홍익대학교 교수 ····· 81

김 대 종 세종대학교 교수 ····· 91

개 회 사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신 우**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격려하기 위해 자리해주신 조정식 국회의장님,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호 간사님과 유상범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를 맡아주신 하연섭 교수님, 발제를 해주실 기획예산처 김명중 예산실장님과 우리 처 임명현 예산분석실장님, 토론에 나서주실 이정혁, 김대종 교수님, 그리고 오늘 예산안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토론회는 올해로 스물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재정운용 방향을 살펴보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올해 토론회 역시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전년보다 30.4% 증가한 880.8조원이며, 총지출은 전년보다 12.8% 증가한 820.9조원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적자,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8.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AI·첨단산업, 청년, 지방, 민생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 재정운용체계의 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와 함께 재정운용체계의 변화가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세입 전망의 타당성, 주요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집행가능성,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그리고 주요 재정제도 개편의 영향 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내년도 국가재정의 주요 현안과 재정운용 방향을 폭넓게 논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국회의 충실한 예산안 심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신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신 우**

격 려 사



국회의장 **조 정 식**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조정식입니다.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태호, 유상범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한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의 삶으로 폭넓게 이어져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AI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중장기 과제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재정은 당면한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재정투자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국회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
국민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국회는 민생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예산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정책효과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여야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재정투자의 효과와 중장기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회의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논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국회의장 **조 정 식**

축 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광 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예산" 2027년도 예산은 이 기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봐야 합니다.

국가는 부자가 되어가는 만큼, 국민의 삶도 함께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의료, 노후, 문화생활, 공동체지수 등
국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실제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예산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국가의 돈주머니도 정부 예산을 넘어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정부 예산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산,
정책금융과 민간자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국가가 가진 네 개의 돈주머니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 것인지, 국가의 자산을 총동원해
국민의 삶과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재정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런 기준으로 2027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없는지,
반복되는 불용과 이월은 없는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다음 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도 살피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방식도 바꿔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가예산 AI 분석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
실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AI를 활용해 국가예산을 한눈에 보고,
반복되는 사업과 불용·이월, 비효율적인 예산도 보다 빠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맞게 예산 심사도 더 빠르고 정밀하게 바꿔가겠습니다.
아낄 곳은 확실히 아끼되,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AI와 첨단산업,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 청년의 기회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는 필요한 투자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줄여야 할 예산은 줄이고, 투자할 곳에는 제대로 투자하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을 짚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예산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정부와 국회의 성적표로 만들 것인지 함께 답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광 재**

2027

예산안 토론회

2026.11.2. 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발 제 1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김 명 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발 제 2

2027년도 예산안 주요 분석 내용

임 명 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2027

예산안 토론회

발 제 1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김 명 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예산처

목차

01 2027년도 예산안의 의미

02 재정 총량

03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04 미래대응기금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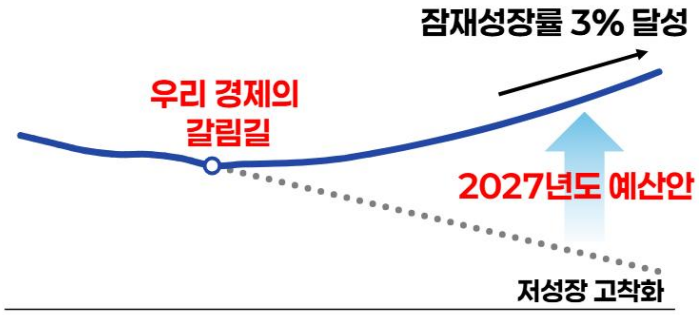
05 재정운용 혁신

06 주요 투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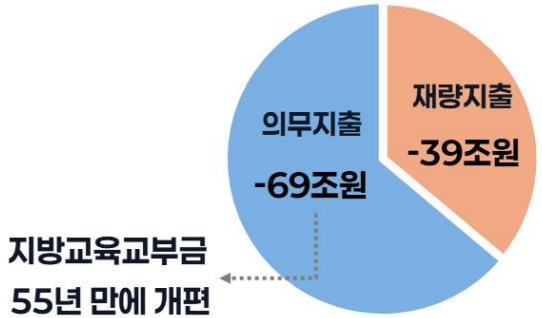
1. 2027년도 예산안의 의미

담대한 투자로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

잠재성장률 반등 | 성장 과실의 확산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 |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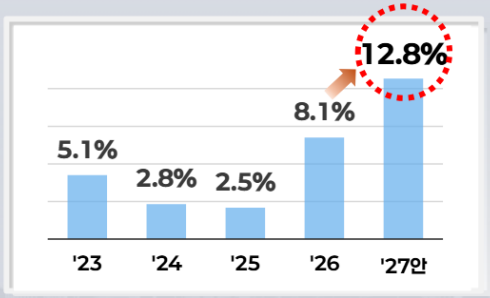
2. 재정 총량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

'27년 총지출

역대 최대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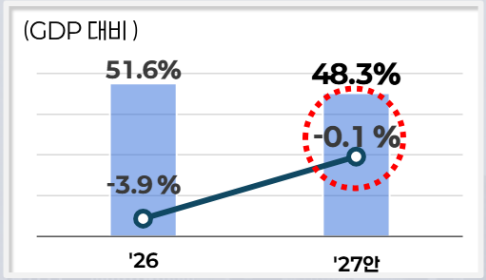
12.8%



'27년 수지·채무

관리수지 - 3.9%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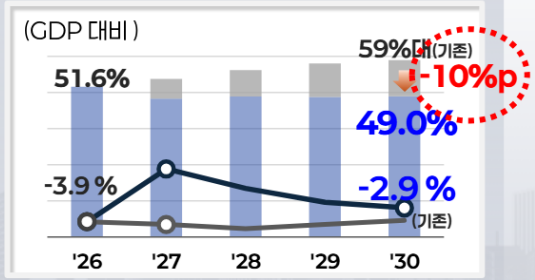
국가채무 51.6% → **48.3%**



'26~'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임기내 관리수지 **-3% 이내**

임기내 국가채무 **49% 이내**



2. 재정 총량

IMF,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40년 만에 2년 연속 반등 전망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10월) 자료 분석

잠재성장률 = 총요소생산성 + 자본 + 노동

생산성 재정·통화 정책조합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 조화

자본 반도체 설비투자 확대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자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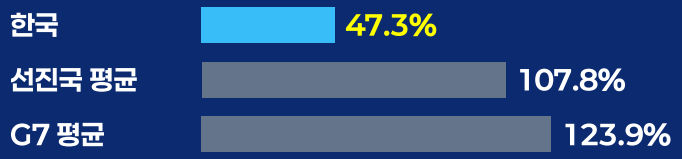
노동 고용률 상승
15~64세 고용률 70.6%(9월 기준, 역대 1위)

추세적 하락에서 반등으로, 잠재성장률 3%를 향해 도약

2. 재정 총량

IMF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26.10월)

한국의 부채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이하



* '26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전망

IMF는 우리나라 부채비율 전망 대폭 하향(4월 →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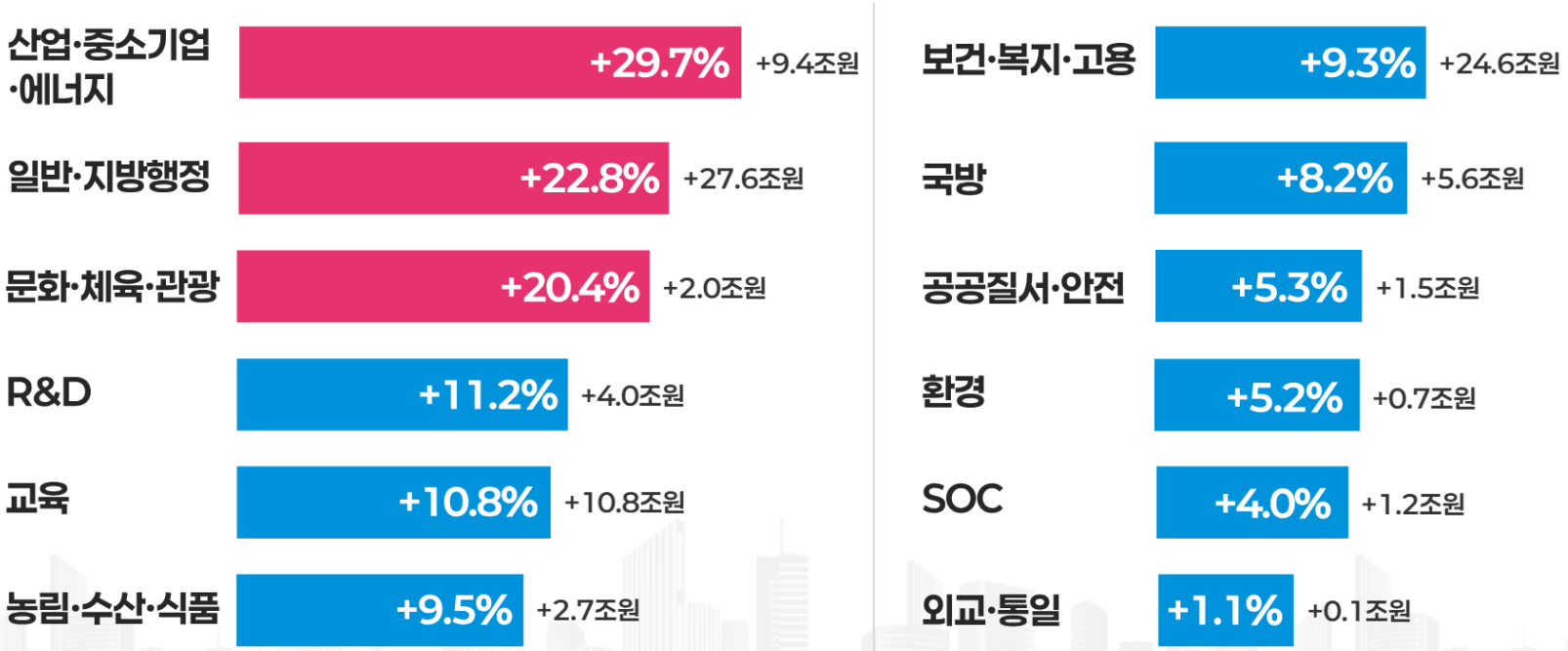
-7.1%p	-13.4%p
'26년 부채비율 전망	'31년 부채비율 전망
(54.4% → 47.3%)	(63.1% → 49.7%)

국제기구 · 신용평가사 평가

IMF	"통화·재정 정책조합 긍정적"	'26.10
OECD	"재정·통화정책이 소비 뒷받침"	'26.7
S&P	"정부부채 부담 낮은 수준"	'26.4
무디스	"미래대응기금으로 국채 축소, 신용도에 긍정적"	'26.9
피치	"예상보다 안정적인 부채 경로"	'26.9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3.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9.7%
+9.4조원
일반·지방행정
+22.8%
+27.6조원
문화·체육·관광
+20.4%
+2.0조원
R&D
+11.2%
+4.0조원
교육
+10.8%
+10.8조원
농림·수산·식품
+9.5%
+2.7조원
보건·복지·고용
+9.3%
+24.6조원
국방
+8.2%
+5.6조원
공공질서·안전
+5.3%
+1.5조원
환경
+5.2%
+0.7조원
SOC
+4.0%
+1.2조원
외교·통일
+1.1%
+0.1조원

4. 미래대응기금 신설

전략적 투자 플랫폼 + 재정 안정화 장치



4. 미래대응기금 신설

신설 확대

청년
13.3조원

- 청년첫취업지원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 저출생 대응 패키지

성장동력
14.2조원

- 프론티어급 AI 개발
- 모두의 AI
- 제조 암묵지 AI

지방
15.3조원

- 지방미래성장지원금
- 생활편의 복합센터
- 농업 AX

* 여유자금 5조원 포함

교육·인재
10.1조원

- 미래인재성장자금
- 인턴학기제
- 지방국립대 장학금

* 여유자금 2.5조원 포함

5. 재정운용 혁신

"미래·지방·공정·성과"의 원칙으로 재정제도 개편



특별회계·기금 신설

5개 기금,
2개 특별회계



지방주도 성장 뒷받침

지방우대 사업 확대(7→61개),
행정통합인센티브(5조원)



조세지출 재정전환

총 17개 사업,
1.9조원 규모

6. 중점 투자내용

2027년 총지출

820.9 조원

+12.8% | 역대 최대 증가율



5대 중점 투자과제

3대 메가프로젝트+AI	10.8 →	21.3조원	+97.2%
미래 성장엔진 확충	51.2 →	62.8조원	+2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28.2 →	43.3조원	+53.5%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85.7 →	117.1조원	+36.6%
국민 안전·평화	30.7 →	38.3조원	+24.8%

6. 중점 투자내용

신설 확대

1. 3대 메가프로젝트 + AI 총력 지원



-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확대)
  0.1조원 → 0.4조원
- **피지컬 AI 실증** (신설)
  제조, 건설 등 8대 분야
  0.5조원, 총 2.6조원
- **AIDC 생태계 조성** (확대)
  테스트랩 구축 등
  0.2조원 → 0.5조원
- **특화 AI 보안모델** (신설)
  0.1조원
-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2.6조원
- **제조 암묵지 AI** (신설)
  제조명장 노하우 데이터화
  0.3조원
- **전력·용수·산단 지원** (신설)
  한전 출자, 송전선로 지중화 등
  2.1조원
- **모두의 AI** (신설)
  대국민 AI 서비스
  0.25조원
-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 (신설)
  1.5조원
- **풀스택 AI팩토리** (신설)
  0.1조원
- **프론티어급 AI 모델** (신설)
  GPU + 데이터 + 인재
  4.7조원
- **AI 교육** (확대)
  290만명 → 390만명
  1.4조원 → 2.1조원

6. 중점 투자내용

신설 확대

2. 미래 성장엔진 확충

10대 전략기술
AI, 첨단로봇 · 모빌리티 등
11.2조원 → 15.0조원

햇빛소득마을
700개소 → 2,200개소

모두의 창업
2만명, 500만원
0.3조원(추경 등) → 0.4조원

패노메논 연계 K-컬처
K-팝 중심 K-컬처 축제
0.02조원

7 SEED 등 선도기술
SMR, 핵융합, 우주·항공 등
11.0조원 → 13.8조원

전기차 보조금
30만대 → 43만대

재기·재도약 지원
성공패키지, 융자
0.6조원 → 1.0조원

중소기업 성장·도약
성장관리 프로그램, 점프업 등
4.6조원 → 5.4조원

투자형 R&D
지분확보 방식의 R&D
0.1조원

히트펌프 보급
0.02조원 → 0.09조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회보험료, 생활안정자금 등
0.6조원 → 0.9조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수출바우처 2배 확대 등
0.8조원 → 1.2조원

6. 중점 투자내용

신설 확대

3.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인재양성 부트캠프
1.3만명 → 4.5만명
0.1조원 → 0.4조원

청년첫취업지원
16만명
0.4조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넓은 평수 2만호
3.8조원

청년문화예술패스
모든 청년 대상, 매년 지원
0.04조원 → 0.8조원

인턴학기
6만명
0.5조원

우리아이자립펀드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
0.1조원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완화(중위 60 → 100%)
0.1조원 → 0.2조원

모두의 카드
537만명 → 955만명
0.3조원 → 0.4조원

K-뉴딜 아카데미
5만명
0.5조원

청년미래적금
모든 청년에 지원
0.7조원 → 1.7조원

저출생 대응 패키지
혼인·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최대 7,500만원, 6.1조원

고립은둔청년 회복
0.6만명
0.02조원

6. 중점 투자내용

신설 확대

4.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지방투자 시 최대 50% 지원
0.7조원

지방국립대전액장학금
30개교, 의·치·약·수 제외
0.2조원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등
22.4조원 → 27.1조원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5조원

소상공인특별채무조정
약 13.5만명 지원
0.7조원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전예방, 출동·치료, 일상회복
0.07조원 → 0.09조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3조원

농어촌기본소득
17개군 → 35개군
0.3조원 → 1.2조원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0.3조원

5. 안전·평화

자주국방 핵심전력
핵추진잠수함, KF-21 등
1.4조원 → 3.4조원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
호우·화재 대응 첨단화
2.5조원 → 3.2조원

국익우선 실용외교
전략적 ODA 등 K-이니셔티브
0.7조원 → 1.3조원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2027년도 예산안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2027

예산안 토론회

발 제 2

2027년도 예산안 주요 분석 내용

임 명 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회예산정책처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2027년도 예산안
주요 분석 내용

2026. 11.



목 차

Ⅰ. 재정총량 및 분야별 분석

Ⅱ. 주요 현안 및 사업 분석



제1장

재정총량 및 분야별 분석

01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

02 분야별 재원배분

03 분석의견: 재정총량

04 분석의견: 분야별 재원배분

제1장 재정총량 및 분야별 분석

01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

880.8조원
총수입
+205.6조원(30.4%)

820.9조원
총지출
+93.0조원(12.8%)

△3.1조원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0.1%

1,519.8조원
국가채무
GDP 대비 48.3%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총지출 (단위: 조원, %)

구분	2026		2027 예산안(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금액	비율
총수입	**675.2**	**700.6**	**880.8**	**205.6**	**30.4**
국세수입	390.2	415.4	584.4	194.2	49.8
세외수입	285.0	285.2	296.4	11.4	4.0
총지출	**727.9**	**753.0**	**820.9**	**93.0**	**12.8**

주: 증감은 2026년 본예산 대비, GDP 대비 증감은 %p

2027년도 예산안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조원, %)

구분	2026		2027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통합재정수지	△52.7	△52.5	59.9	112.6
관리재정수지	**△107.8**	**△107.6**	**△3.1**	**104.7**
(GDP 대비)	(△3.9)	(△3.8)	(△0.1)	(3.8)
국가채무	**1,413.8**	**1,412.8**	**1,519.8**	**106.0**
(GDP 대비)	(51.6)	(50.6)	(48.3)	(△3.3)

02 분야별 재원배분

■ 증가율 상위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29.7%), 일반·지방행정(22.8%), 문화·체육·관광(20.4%)
- **전력 인프라**,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신설·증액 등** 영향

■ 증가율 하위 분야

- 외교·통일(1.1%), SOC(4.0%), 환경(5.2%)
- **ODA,** 도로개선·유지보수 예산 감소 등 영향

29.7%
최고 증가율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1%
최저 증가율
외교·통일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6 본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총지출	**727.9**	**820.9**	**93.0**	**12.8**
보건·복지·고용	264.4	289.0	24.6	9.3
교육	99.9	110.7	10.8	10.8
문화·체육·관광	**9.6**	**11.6**	**2.0**	**20.4**
환경	13.9	14.6	0.7	5.2
R&D	35.5	39.5	4.0	11.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8**	**41.2**	**9.4**	**29.7**
SOC	27.7	28.9	1.2	4.0
농림·수산·식품	28.0	30.7	2.7	9.5
국방	67.7	73.3	5.6	8.2
외교·통일	7.0	7.1	0.1	1.1
공공질서·안전	27.3	28.8	1.5	5.3
일반·지방행정	**121.4**	**149.0**	**27.6**	**22.8**

주: 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보건·복지·고용과 국방은 군인연금기금 이관 등 기준 개편 후 수치

03 분석의견: 재정총량 (1/2)

① 재정건전성: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양호할 전망

- 다만, 국가채무 비율 개선은 반도체 경기에 따른 **명목GDP 증가 효과**가 크고 잠재적 재정위험은 커지고 있어 **재정여력 확보 노력 병행 필요**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NABO vs 정부(2026~2030) (단위: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관리재정수지	NABO	△1.4	0.1	△1.1	△2.0	△2.3
	정부	△3.8	△0.1	△1.5	△2.5	△2.9
국가채무	NABO	43.3	43.2	43.2	42.6	42.5
	정부	50.6	48.3	48.9	48.8	49.0

03 분석의견: 재정총량 (2/2)

② 잠재적 재정위험: 국가채무 외 재정부담 요인 확대 → 총부채 관리 필요

157.3조원
국가보증채무(2030년)
2026년 27.7조원 대비 약 5.7배

53.3조원
국가채무 이자부담(2030년)
2026년 36.5조원 대비 +16.7조원

997.4조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37개 공공기관 부채 (2030년)
2026년 778.3조원 대비 +219.1조원

244.7%
GDP 대비 총부채(2025년)
주요 28개국 중 14위
G20 평균 GDP 대비 총부채 247.0%

- 국가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공공기관 부채·민간부채 등을 포괄하는 **부채 관리방안 검토 필요**

③ 총지출 확대(12.8%)의 물가 영향 점검 필요

- 물가안정목표(2%) 초과, 기준금리 3.0% 유지 여건에서 총수요 증가
  → 물가·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취약기업 부담 가중 가능성**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전망(2026.8월): 2026년 2.7%, 2027년 2.3%

04 분석의견: 분야별 재원배분 (1/2)

① 보건·복지·고용 **복지 의무지출 증가 대응 관리**	- 복지 의무지출 2030년 256.7조원('26년 대비 30.8% ↑) 전망 - 생계급여 기준 개선, 부정수급 차단, **근로 연계형 생산적 복지** 구축 필요
② 교육 **인구구조·정책수요를 함께 고려한 재원배분**	- 유보통합, 노후 학교시설, 특수교육 등 재정수요 증가 가능성 -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단계별 중장기 재정소요 종합 전망** 필요
③ 환경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 중기 연평균 증가율 4.1%(총지출 8.4%의 절반), 총지출 대비 비중 1.9%→1.6% - 예방적 성격의 환경 투자 고려, **기후위기 대응 재원 배분** 필요

04 분석의견: 분야별 재원배분 (2/2)

④ SOC **노후 인프라·재난 대응 중심 재원배분**	- SOC 분야 4.0% 증가, 미래대응기금분(1.6조원) 제외 시 전년 대비 감소 - **노후 인프라·재난시설 중심 적정 투자 규모**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⑤ 국방 **'병력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재구조화**	- 처우개선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첨단 전력 도입예산 제약 우려 - **AI 기반 기술개발, 유·무인복합체계 전력화** 중심 재원 재배분
⑥ 공공질서·안전 **범죄·재난 대응 투자 확대**	- 신종 ·지능형 위협 대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선제적 투자 필요 - 재난관리 부문 총지출 증가율 둔화('27-'30, 0.7%) 폭염 등 기후위기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전 주기 투자 필요



제2장

주요 현안 및 사업 분석

01 미래대응기금 분석
02 지방교부세 개편안 분석
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분석
04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안 분석
05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사업 분석
06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사업 분석
07 법령 제·개정 연계사업 분석
08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 현황 분석
09 결산 연계 예산안 분석

01 미래대응기금 분석 (1/4)

■ (설치목적) 전략적 투자 플랫폼 + 재정안정화장치

- 「미래대응기금법」 제정과 「국가재정법」 등 개정을 전제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 (재원 및 운용)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4대 계정 사업비·여유자금 운용

158.5조원
주요 재원(추가세수)

45.4조원
4대 계정 사업비(129개 사업)

103.4조원
여유자금 운용

계정별 신규·이관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계정	순수신규	통폐합·분리	타부처 이관	계	기존사업 비중
청년	27,011	40,047	66,238	133,296	79.7
성장동력	45,771	-	95,866	141,638	67.7
지방	88,920	-	13,742	102,662	13.4
교육·인재	26,964	-	49,066	76,029	64.5
총괄	233	-	-	233	-
계	**188,899**	**40,047**	**224,912**	**453,858**	**58.4**

주: 기존사업 비중 = (통폐합·분리 + 타부처이관) / 계
자료: 기획예산처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01 미래대응기금 분석 (2/4)

[참고] 주요 추가세수 활용 방안

구분	주요 내용	근거
미래를 위한 투자	- **성장동력 확충** 및 **인적자본 투자** - **신산업·전략기술** 육성 지원	- 반도체등특정업종가변성에대응한**지속가능한세수기반**확충 - 잠재성장 제고를 통한 **중·장기 재정 여력** 확보
미래대응을 위한 적립	- 세수결손·긴급 재정위기 등에 대비한 **재원 적립** - 초과세수 일부를 **별도 재원(기금 등)으로 비축**	- 일시적 호황 이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안전판** - 잠재적 경제·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력 확보
국가 채무 관리	- 기발행 **적자국채 조기상환** - 신규 **국고채 발행 규모 축소**	- 국가채무·이자비용 누적에 따른 **건전성 악화 방지** - 일시적 세수를 항구적 지출로 연결하는 **위험 차단**

01 미래대응기금 분석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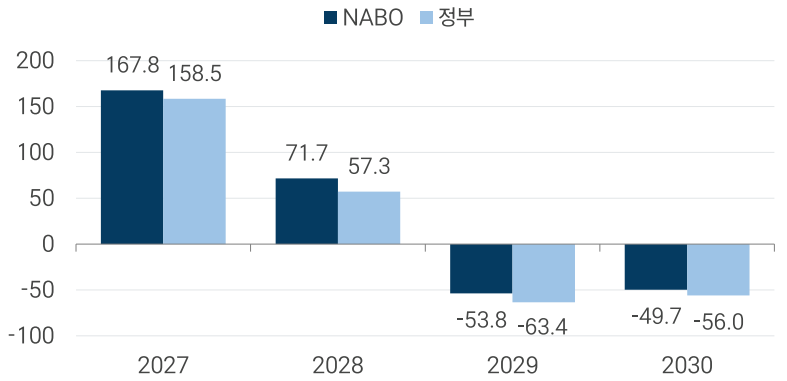
■ (재원 안정성) 추가세수는 일시적 재원으로, '29년 이후 미발생 전망

■ (차별성) 사업비의 58.4%가 기존 회계·기금에서 이관·분리

■ (재정 경직성) 아동기본수당 등 경직적 지출 다수
→ 일반회계 부담 전가 우려

■ (심사체계) 재경위와 타 상임위와의 심사 분리
→ 예산안 심사 부실화 우려

추가세수 추이: NABO, 정부 (단위: 조원)



⇒ 종합의견

① 성장동력계정
대규모 장기 투자 중심 운용 → 잠재성장률·세수역량 제고

② 청년계정
기존 회계·기금으로 재이관하거나 별도 기금 설치

③ 지방·교육·인재계정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전재원으로 운용

01 미래대응기금 분석 (4/4)

기타 주요 쟁점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쟁점	문제점	개선방안
세계잉여금 제도	초과세수·세계잉여금 기금 전출로 채무 감축 경로 약화	채무상환 의무비율 상향 또는 우선 배분 법제화
2026년 초과세수	56.2조원 전액 적립 시 교부세 정산·채무상환 생략	적립 여부·규모 신중 검토, 요건·한도 법률 명시
계정별 재원배분 원칙	총괄계정의 배분 기준·최소 한도 부재	배분 기준, 전출 한도, 최소 유보 규모 규정
세입세출외 기금 적립·인출	세입 변동 대응 결정권이 정부로 이전	인출 요건과 한도를 법률에 명시
자체변경한도	주요항목 변경한도 30%는 과도	20% 로 조정, 계정별 프로그램 구조 개편

02 지방교부세 개편안 분석 (1/2)

■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을 교부세 산정에서 제외 미래대응기금 적립

- 지방재정 안정화 및 지역주도 성장 지원 목적

현행	개편
내국세의 19.24%	• 내국세가 추세치 상회 시 : 추세치 × 19.24% • 내국세가 추세치 하회 시 : 내국세 × 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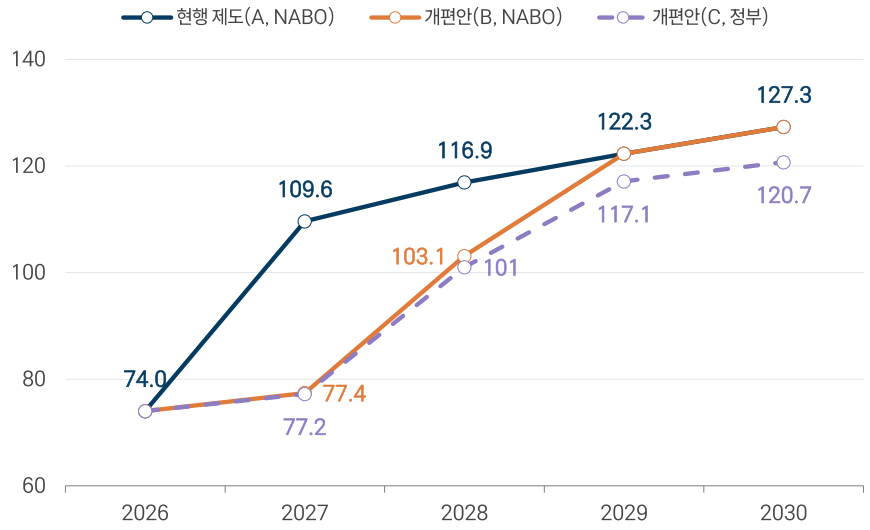
주: 추세치 = (2년 전 내국세 결산액) × (1+내국세 10년 이동평균증가율)²

■ 교부세 정률분 69.7조원, 현행 대비 30.5조원(30.4%) 감소, 이 중 15.3조원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으로 지원

지방계정 지원 구조 (단위: 억원, %)

지방계정 계	보전재원	지방미래 성장지원금	통합특별시 지원	국고보조 사업
152,662	50,000	35,000	35,000	32,662
(50.1)	(16.4)	(11.5)	(11.5)	(10.7)

2027~2030 지방교부세 전망치 비교 (단위: 조원)



02 지방교부세 개편안 분석 (2/2)

① 재정안정화	**호황기 추가세수는 중앙 귀속, 하강기 부담은 지방에 집중** - 보전 여부·규모가 정부 재량 → 세수 감소 위험을 지방이 부담할 가능성
② 재정자율성	**자주재원 축소, 중앙정부 처분 재량 확대** - 보통교부세 조정률: 94.0%('17)→86.0%('22)→**70.1%('26)** - 세출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 41.3%('17)→37.4%('22)→**34.0%('26)**
③ 지역주도 성장	**지방계정 사업구성의 취지 부합성 미흡** - 국고보조사업 위주, 지특회계·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중복
④ 개편 시 고려사항	- 추세치 하회 시 **중앙정부 보전의무·기준 법률 명시** - 지방계정 **보전재원**은 **독립 운용**, 사업성 예산은 **포괄보조**로 편성

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분석

■ 산정방식: 내국세 연동 →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현행) 내국세의 20.79% + 국세 교육세 중 일부

⇒(개편) 전년도 교부금 × (1+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 [1+(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0.35)]

※ 교부금 금액은 최소 전년 수준 유지 (차액 보전 명시)

■ 향후 5년간 현행 대비 연 24.1~34.5조원 감소 전망(NABO)

■ 교부금 개편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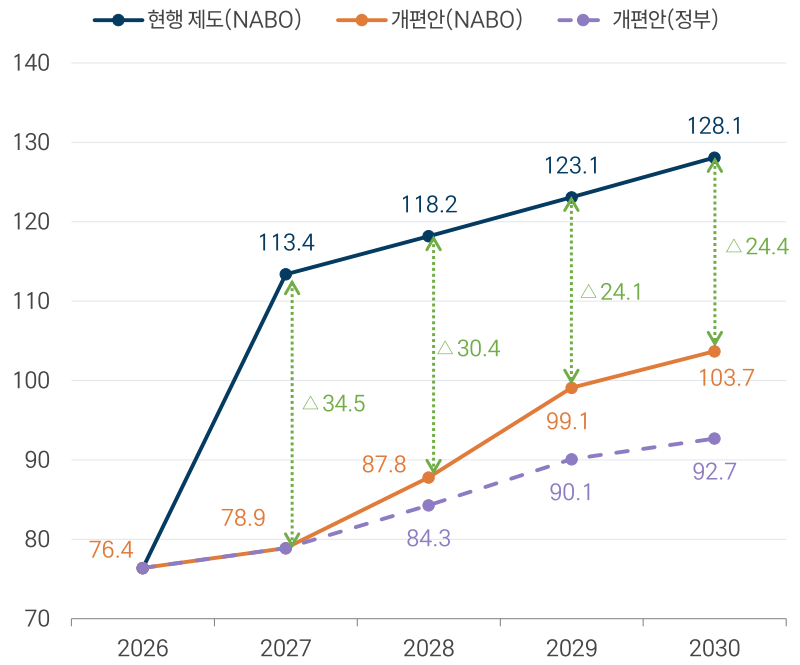
① 학령인구 감소 지속 및 경기 둔화 시 **지방교육재정 여력 축소 우려**

② 향후 **교육재정 수요 증가 요인** 고려 필요

- 유보통합, 노후 학교시설 개선, 특수교육 강화 등

③ **학령인구 반영률(35%)**의 적정성 및 교부금 변동성 완화를 위한 **연평균 산정기간 연장 방안**(3년→5년 이상) 검토 필요

개편 전후 교부금 전망 비교 (2026~2030) (단위: 조원)



제2장 주요 현안 및 사업 분석

04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안 분석 (1/2)

2027년 예산안

반도체 · 피지컬AI · AI데이터센터 + 기반시설

총 **8.9조원**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전력·용수·산단 인프라
3.4 조원	**3.1** 조원	**0.5** 조원	**2.1** 조원

반도체

① 법정 기본계획 수립 이전 편성 → **재정투자 체계성 확보** 필요

② 메모리 대비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미비**(점유율 1.96%) → **산업구조 다변화** 고려한 투자 필요

③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확보 문제** 해결 및 **법률 개정** 필요

- 통합재정지원(1.5조원)은 예타 면제, **기금 출연 이후 점검체계** 미비

04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안 분석 (2/2)

피지컬 AI	① 범부처 중장기 정책방향·**법정 정책조정체계** 정립 필요 ② 실증사업에 선행 **기술개발·성능검증 결과 반영 필요** ③ 데이터 생산·실증·활용 **환류체계** 구축 필요
AI 데이터센터	① 기 추진 사업과 메가프로젝트 **연계 강화 필요** ② AIDC 클러스터(3,740억원) **예타 면제·적정성 검토 미실시** ③ 8개 사업 분산 추진 → **통합 관리·지자체 협업** 필요
전력·용수·산단	① 국가기간 전력망 미지정, 용수사업 국가수도기본계획 미반영 → **법정계획·법령 정비 필요** ② 한전 사채발행한도 축소(5배→2배), 수자원공사 적자 → **수행기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05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사업 분석 (1/2)

■ 2027년 청년정책 예산 43.3조원 (총지출의 5.3%)

- 주거 18.5조원, 교육 8.0조원, 혼인·출산·양육 6.1조원, 일자리·창업 5.1조원, 자산형성 4.2조원, 생활 ·문화 1.4조원

① 미래대응기금 중심 편성 → 재원 안정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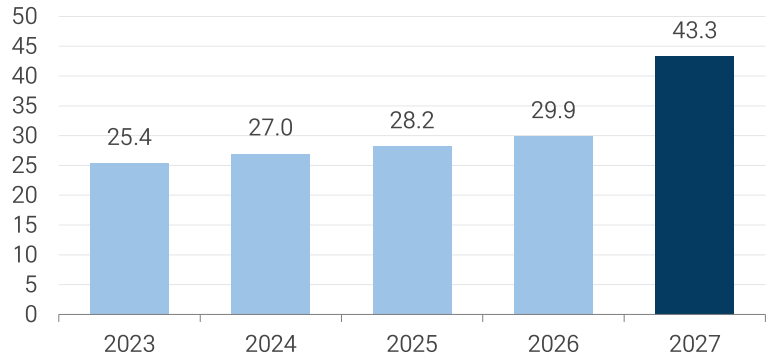
- 청년계정(13.3조원)·교육인재계정(10.1조원)에 **54.0% 집중**
  → 추가·초과세수 의존 구조의 **적절성 검토** 필요

② 소득·자산과 무관한 보편 지원 → 역진성 우려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 6구간 이하 →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 수준 고려 시 추가 지원 혜택 제한적
  7~10구간(중위소득 130% 이상) →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적거나 없었으므로 **추가 지원 혜택이 상대적으로 큼**
- 청년미래적금
  : **고소득·고자산 청년도 지원** → 세대 내 격차 확대 우려

⇒ 자산형성 사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자산 수준 고려** 필요

청년정책 예산 규모(2023~2027) (단위: 조원)



주: 2023~2025년 결산, 2026년 제1회 추경, 2027년 예산안 기준

39세 이하 평균 자산 현황 (단위: 만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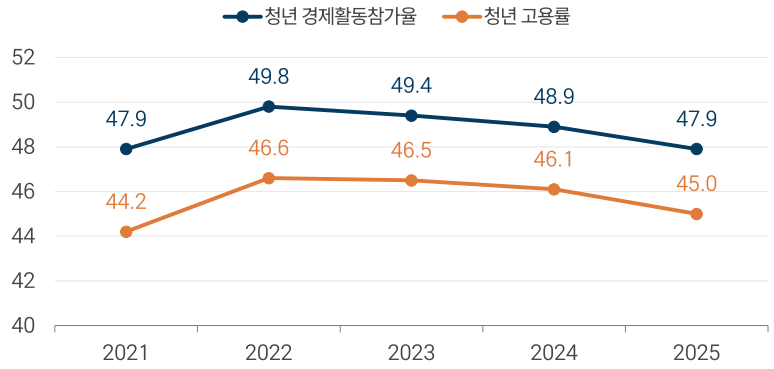
구분	전체(A)	상위 10%(B)	격차(B/A)
2015년	23,365	62,000	2.65
2025년	31,498	98,000	3.11

05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사업 분석 (2/2)

③ 청년 고용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최근 5년 약 10조원 지출에도 **청년 고용률 정체**

청년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단위: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④ 출생 시점에 따른 지원 격차 → 형평성 검토 필요

- 2027년 7월생부터 아동기본수당 등 **새 체계** 적용
-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3,560만원
'27.6월 이전 출생아
0~12세 현금수당

→

4,840만원
'27.7월 이후 출생아
0~12세 현금수당

주: 가정 양육, 수도권 기준

-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경우에도, 2026년 9월 이후 출생 자녀 가구로 한정
  → 출생시기에 따라 최대 연 120만원(중위소득 50% 이하 경우) 지원금 혜택 차별 발생

06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사업 분석

■ 「필수의료특별법」에 따라 '27년 1.3조원 특별회계 신설

- 신규사업 0.4조원, 이관사업 0.9조원

지역 간 의료격차(인구 천명당 의사 수)

3.69명	1.43명
서울	경북

주: '25년 12월 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전망 (분석의견 ① 관련)

0.2조원	0.8조원
'27년 예수금 세입의 16.1%	'30년 말 예수금 잔액 '27년의 약 4배

주: '28년 이후는 정부 계획 전제 추계 예시(금리 3.85% 적용)

① 재원 안정성 제고 필요

- 세입의 **83.7%가 담배 개별소비세** → 세수 정체 전망으로 예수 의존 우려

② 사업 간 연계·효과성 제고 필요

- 같은 기관에 인건비·시설·운영비 지원 사업 다수 편성
  → **사업 간 조정 기준 부재**

③ 의료 공백·재정 여건 반영 배분

- 공모 방식으로 **의료취약지 33개 중 29개 미지원**
- 국고보조율은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 적용** (서울 제외)

07 법령 제·개정 연계사업 분석

■ 법령 제·개정 연계 분석 주제 총 48건

구분	유형	건수
법적 근거 미비 (45건)	법률안 미제출 사업	11건
	계류 법률안과 연계 심의 필요 사업	31건
	하위법령 미비 사업	3건
법적 근거 우회(6건)	법정 절차·법률 규정 우회	3건
	대통령령 근거 기구 설치 및 사업 추진	2건
	행정계획 근거 출자	1건

주: 3건 중복

■ 분석의견

-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입법심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중장기 재정부담과 재원배분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
- 특히, 법률안 제출 및 입법 논의에 앞서 재정구조 개편, 핵심사업(랜드마크), 의무지출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확인

법률안 심사 연계 주요 사업 (□ 법률안 미제출)

구분	사업	법률안
재정구조 개편	미래대응기금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략수출금융기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장려기금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농업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법안
	자원안보기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정부 핵심사업 (랜드마크)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국립대학회계법
	혼인지원금	건강가정기본법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1]	아동수당법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군공항이전법
의무지출	국가배상금 지급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법

주: 1) 아동기본수당은 정부의 핵심사업 및 의무지출 동시에 해당

08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예타 면제 72개 사업, '27 안 10.4조원

(총사업비 138.3조원)

- 국가정책적 추진(10호) 면제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필요**
  (10호 면제: 2027년 46개 사업, 총사업비의 93.6%)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없이 예산 편성된 사례

-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재정지원 사업, AIDC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적정성 논의** 필요,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부대의견)

2027년 예산안 편성사업 중 예타 면제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

면제사유	건수	총사업비	비중	2027 편성액
1호 공공청사	9	9,477	0.7	801
4호 국제협약	1	583	0.0	8
8호 법령상 의무	11	41,219	3.0	337
9호 실익 없음	5	36,941	2.9	8,857
10호 국가정책	**46**	**1,294,344**	**93.6**	**94,218**
합계	**72**	**1,382,564**	**100.0**	**104,220**

주: 총사업비는 주무부처 요구액 기준
자료: 202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재작성

09 결산 연계 예산안 분석

2024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2024결산	148	437	1,493	(91)	1,987
2025결산	70	289	1,004	(40)	1,323

주: 1. 변상·징계 해당 없음
2. 2025결산은 11개 상임위(정보위 제외) 예비심사 결과 기준
※ 운영·재경·교육·외통·산자중기위 미의결

시정요구제도 개선의견

① 예산상 조치 필요 시정요구 중점 관리

- 예산안 제출 시 **반영 여부 국회에 보고**

② 국회 결산심의 조기 실시

- **7월 말까지 결산 심의 완료**
  →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적시 반영

③ 조치결과 점검·평가체계 마련

- 장기 미이행 사유와 이행계획 보고
- 조치 부적정 판단시 **추가조치 요구** 등 실효성 확보

2027

예산안 토론회

2026.11.2. 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토 론

정 태 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 상 범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 정 혁

홍익대학교 교수

김 대 종

세종대학교 교수

2027

예산안 토론회

토 론 1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정 태 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정 태 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I. 2027년 경제·재정 여건 및 예산안 평가

1. 대내외 경제여건과 재정의 역할

◉ 2027년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민간소비 회복이 이어지겠으나, 2026년의 높은 성장세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전망.

– 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7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는 2.2~2.9% 수준.

[표1]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단위: 실질GDP 성장률, %)

기관	발표일	2026년	2027년
정부	2026. 7. 14.	3.0	2.2
KDI	2026. 8. 20.	3.2	2.2
한국은행	2026. 8. 27.	3.3	2.9
OECD	2026. 9. 23.	3.7	2.6
국회예산정책처(NABO)	2026. 9. 30.	3.5	2.7
IMF	2026. 10. 13.	3.3	2.8

자료: 정부·KDI·한국은행·OECD·NABO·IMF 2026년 경제전망 발표자료

◉ 반도체 수출과 AI 관련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글로벌 AI 투자 둔화 가능성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등 대외 위험요인도 상존함.

–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출 중심의 성장성과가 내수와 고용,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생 회복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함께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2. 2027년도 예산안의 재정총량과 주요 특징

- 정부는 2027년 총수입을 880.8조원, 총지출을 820.9조원으로 편성. 2026년 본예산 대비 총수입은 30.4%, 총지출은 12.8% 증가한 규모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반영함.
  -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를 반영하여 2026년 390.2조원에서 2027년 584.4조원으로 확대될 전망.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원(GDP 대비 △0.1%), 국가채무는 1,519.8조원(GDP 대비 48.3%)으로 제시.

[표2]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재정지표

구분	2027년 정부안	주요 내용
총수입	880.8조원	전년 대비 205.6조원(30.4%) 증가
총지출	820.9조원	전년 대비 93.0조원(12.8%) 증가
국세수입	584.4조원	전년 대비 194.2조원(49.8%) 증가
관리재정수지	△3.1조원	GDP 대비 △0.1%
국가채무	1,519.8조원	GDP 대비 48.3%, 전년 대비 106.0조원 증가

주: 증가액과 증가율은 2026년 본예산 대비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6.9.).

- 2027년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개선되지만, 중기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전망.
  - 정부 중기계획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7년 3.1조원(GDP 대비 △0.1%)에서 2030년 100.8조원(GDP 대비 △2.9%)으로 확대.

II. 2027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1. 5대 중점투자 과제와 재원배분 방향

-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목표로 잠재성장률 제고와 성장성과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통한 K자형 양극화 완화를 5대 중점투자 과제로 제시.
  - 미래 성장 분야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 + AI 총력 지원」 21.3조원과 「미래 성장엔진 확충」 62.8조원을 편성.
  - 청년·민생 및 안전 분야에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43.3조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117.1조원, 「국민 안전·평화」 38.3조원을 배분.

-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I·첨단전략산업 투자, 에너지 대전환, 창업·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을 추진.

- 청년의 교육·일자리·자산형성·주거·혼인·출산·양육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국토대전환·지방주도 성장과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지원, 적극복지 등을 추진.

2. 분야별 투자 확대와 재정운용 방향

-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지·교육 및 지방행정 분야의 재원도 증액 편성.
  - R&D 예산은 39.5조원(전년 대비 11.2% 증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41.2조원(29.7% 증가),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89.0조원(9.3% 증가), 교육 분야는 110.7조원(10.8% 증가),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149.0조원(22.8% 증가)으로 편성.

-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추진.
  - 재량지출 38.6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재원배분 조정 등을 포함한 의무지출 69.0조원 규모의 제도개편을 추진.

-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을 도모할 계획.
  - 미래대응기금 수입안 162.3조원은 전략적 투자, 국채 신규발행 축소 및 여유자금 운용에 활용할 계획.

III. 주요 정책별 예산심사 쟁점

1. AI·R&D 투자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정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신설, AI 인프라 구축, 프론티어급 AI모델 개발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
- 반도체 특별회계의 사업 구성과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분의 적정성 검토.
  - 2027년 반도체 특별회계 2.6조원 중 기존 사업 이관분과 신규·확대 사업을 구분해 실질적인 투자 증가 규모 확인.
- AI 컴퓨팅 인프라 예산의 기존 투자 중복 여부와 실제 이용수요 검토.
  - 정부 확보 GPU와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구축·가동계획을 고려한 신규 인프라 투자 타당성 검토.
-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 준비상황과 집행 가능성 점검.
  - 전력·용수 공급, 산업단지 조성 및 인허가 일정이 기업의 설비투자와 시설 가동 시점에 부합하는지 검토.
- R&D 예산은 연구의 지속성과 기술실증·사업화 성과를 고려해 배분의 적정성 검토.
  - 부처별 유사·중복 사업을 점검하되 기초·원천연구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고려.
  - 기존 연구성과와 기술실증·사업화 실적을 바탕으로 신규·증액 사업의 타당성 검토.

2. 청년·주거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 청년지원 예산은 사업 간 역할 분담과 실제 취업·자립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
  -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3,793억원, 16만명)의 취업준비 지원과 K-뉴딜 아카데미(4,895억원, 5만명)의 기업주도 직무훈련을 구분해 사업 간 연계성과 지원 대상의 중복 여부 점검.
  - 취업률·고용유지율·일자리의 질 등 성과지표와 청년의 취업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 공적주택 예산 30.0조원과 21.8만호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주거안정 효과 심사.
  - 사업승인·착공·입주 등 단계별 추진 일정과 LH 등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집행역량 점검.
  - 신규 보편형 임대주택 3.6만호의 부지 확보와 청년 대상 주택 10.6만호의 공급 지역·유형이 실수요에 부합하는지 검토.

- 소상공인·취약노동자 지원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예산은 기존 사업성과와 지원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심사.
  -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취약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 및 기존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예산규모의 적정성 점검.
  - 적극복지와 주거·돌봄 사업의 지원 사각지대 및 생활비 부담 완화 효과를 고려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검토.

3. 지역주도 성장과 지방재정 확충

- 정부는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에 33조원을 편성하고, 이 중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에 9.8조원을 배분해 권역별 전략산업과 성장거점 구축을 추진.
  - 성장엔진특별보조금 7,000억원 신설, 지역주도형 AI 전환 및 지방국립대 육성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인재양성 기반 강화 추진.

- 지역주도 성장사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사업 간 연계성을 중심으로 심사.
  -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의 기업 지원요건과 투자 유발효과를 검토하고, 지역 중소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성과목표 점검.
  - 지역산업·인재양성·SOC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배분의 적정성 검토.

- 지방재정 제도개편에 따른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여력 변화 점검.
  - 정부는 5극3특 초광역계정 신설(2.8조원)과 포괄보조 확대(10.6조원→11.9조원)를 추진.
  - 교부세 개편 산식에 따른 지방정부별 재원배분 규모를 기존 산식과 비교해 재정여력에 미치는 영향 점검.

-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이 지방정부의 사업 선택권과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지 검토.
  - 지방교부세와의 재원 성격·사용방식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점검.

[표3] 2027년도 주요 정책 분야별 예산심사 쟁점

분야	정부안 주요 내용	국회 심사 쟁점
AI·R&D	3대 메가프로젝트·AI 21.3조원, R&D 39.5조원	신규·확대 투자 규모, AI 인프라 중복·이용수요, 사업 집행 가능성, R&D 성과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43.3조원	사업 간 역할 분담, 취업·고용유지 성과, 청년 자립
주거	공적주택 예산 30.0조원, 공급 21.8만호	사업 준비·집행역량, 공급계획 실현 가능성, 실수요 부합
지역	국토대전환·지방주도 성장 33조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교부세 개편 영향, 지방재정 자율성

주: 정부안의 주요 투자 규모는 정책과제별·분야별 분류에 따라 일부 중복될 수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홍보자료」(2026.9.)

4. 미래대응기금의 운용과 재정관리 과제

◉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투자와 재정안정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표4]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

(단위: 조원)

구분	규모	주요 내용
사업지출	45.4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투자
청년계정	13.3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형성, 혼인·출산 지원
성장동력계정	14.2	AI·전략기술, 지분투자, 전력·용수 인프라
지방계정	10.3	지방 성장지원, 생활편의시설, 행정통합 지원
교육·인재계정	7.6	첨단인재 양성, 고등·영유아교육 지원
국채 신규발행 축소	12.5	기존 계획 대비 국채발행 물량 축소
여유자금 운용	104.4	향후 투자 및 재정안정 대응
합계	**162.3**	

주: 2027년 기금 수입안 기준. 사업지출은 여유자금 제외. 여유자금 104.4조원은 총괄 96.9조원, 지방 5.0조원, 교육·인재 2.5조원 합계.
자료: 기획예산처,「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

- 미래대응기금은 기존 재정사업과의 역할 분담 및 실질적인 신규투자 규모를 중심으로 심사.
  - 사업지출 45.4조원에서 기존 사업 이관분과 신규·확대 투자 규모를 구분해 편성 적정성 검토.
  - 기금으로 이관된 계속사업의 중장기 재원 확보계획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점검.
- 대규모 여유자금의 적정성과 국가 전체의 재정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여유자금 104.4조원의 규모와 적립·사용 기준이 기금의 재정안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
  - 국채 신규발행 축소 12.5조원과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종합해 국가 전체의 재정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심의 범위와 운용성과 관리체계의 적정성 검토.
  -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 가능 범위, 변경내역의 국회 보고, 여유자금 운용성과 평가 등 국회 재정통제의 실효성 점검.

2027

예산안 토론회

토 론 2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포퓰리즘과 백지수표식 예산을 바로잡고,
재정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예산으로

유 상 범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포퓰리즘과 백지수표식 예산을 바로잡고, 재정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예산으로

유 상 범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1.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총평

- [방만하고 모순된 재정 운용]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에 기대어 역대 최대 규모인 820.9조 원(올해 본예산 대비 93조 원, 12.8% 증가)으로 편성됨. 그러나 이 과정에서 10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나라빚(국가채무 1,519.8조 원)이 발생하고, 하루 이자만 1,107억 원(연 40.4조 원, 전년 대비 17.4% 증가)에 이르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헌법적 권한 및 재정 원칙 훼손] 구체적인 내역이나 단가·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백지수표식 예산과 기금 사업을 다수 포함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형해화하고 있음. 특히 빚을 내어 조성하는 104.4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약 13.6조 원(사업비의 30%)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음

- [미래세대 부담 전가] '모두의 지원'을 내세운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현금 지원은 재정의 우선순위를 왜곡하여 절박한 취약계층 지원 재원을 축소시키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함. 특히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감소 대비용이라는 겉포장과 달리 조성 첫해부터 대규모 연례 지출로 소진되고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여 국가재정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 [국민의힘의 심사 기조] 성과평가 미반영 사업의 대폭 정비와 함께, 고물가·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강력한 예산 심사를 전개할 방침임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예산액	쟁점
820.9조 원	2027년 예산안 규모 올해 본예산 대비 93조원↑(12.8%) 역대 최대 증가율
106조 원	내년 늘어나는 나라빚 (올해 1,413.8조 → 1,519.8조 원)
하루 1,107억 원	내년 국고채 이자(연 40.4조 원, 올해 34.4조원 보다 17.4% 증가)
104.4조 원	빚을 내는 한편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두는 돈
약 13.6조 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사업비(30%)

2. 2027년도 예산안 5대 핵심 쟁점

① [재정운용의 왜곡] 일시적 세수 호황에 기대어 지출을 늘리는 '반재정운용'

- (해외 선진국 사례와 역행) 스위스, 호주, 아일랜드 등은 일시적 세수 호황 시 채무 축소 및 미래기금 적립에 활용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단기간에 전액 지출로 소진
- (전위효과 부작용) 반도체 일시 호황 종료 후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늘어난 연례 지출을 축소할 수 없어 재정 위기 초래
- (경기순응적 재정의 모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기준금리 3.0%)에 역행하여 지출을 12.8% 확대함으로써 물가·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서민 고통 가중

② [재정민주주의 파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형해화하는 '백지수표식 예산'

- (헌법 위반 소지) 헌법 제54조(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깜깜이·총액 예산 남발
- (대표적 사례)
  - 미래대응기금 사업비의 30%(약 13.6조 원)를 국회 의결 없이 자의적 변경 가능
  - 총 6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내년 1.5조 원 편성) 등 구체적 내역·일정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집행 지연 중인 '국민성장펀드(1조 원 요구)' 등

③ [예산구조 악화] 방대한 사업과 성과평가를 무력화하는 '반개혁 예산'

- (방대한 사업 비대화) 세부 사업이 9,700개를 넘어 극도로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성과평가와 환류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성과평가 무력화) 감액·개선 요구를 받은 사업들이 단지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오히려 예산이 폭증
  - (사례) '중소기업 재기지원' 834% 증액, '모태조합출자' 1.3조 원 편성(58.5%↑), 단가 인상으로 7,256억 원이 편성된 'K-디지털 트레이닝' 등

④ [포퓰리즘 만연] '모두의 지원'을 내세워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예산

- (보편적 지원의 모순) '모두', '기본사회'를 내세운 무분별한 현금 지원 확대로 정작 절박한 취약계층 지원 재원이 축소되고 재정 지속가능성 훼손
- (불합리한 지원 범위) 소득 요건을 폐지한 '청년미래적금', 소득 무관 '혼인지원금' 등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 (자립 중심 개편 필요) 반복적 지원으로 수혜 조직의 효율성 제고 유인을 약화시키는 '연성예산제약' 우려 극복 필요

⑤ [기금 운용의 모순] 실효성 없는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적 문제

- (저수지 역할의 허구성) 세수 감소 대비용이라 주장하나, 조성 첫해부터 45.4조 원을 지출하며 미래세대 부담 가중
- (구축효과) 정부가 민간 투자 영역에 직접 개입하여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킬 우려
- (법적 요건 위반) 내국세 연동 재원의 기금 전환 및 초과세수 임의 전입을 통해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요건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3.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 (최우선 방점) 고물가·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의 절박한 재기 지원에 집중
- (예산 구조조정) 성과평가 미반영 증액 사업 및 중복·부실 사업 전면 재검토
- (제도적 통제 강화) 기금의 재원 이전 및 변경 권한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재정민주주의 확립

2027

예산안 토론회

토 론 3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2027 예산안 분석과 쟁점: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답으로서의 재정제도 개혁

이 정 혁

홍익대학교 교수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2027 예산안 분석과 쟁점: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답으로서의 재정제도 개혁

이 정 혁
홍익대학교 교수

① 거시적 관점 (macro level)

- 탈단극 시대, 본격적인 지정학적·지경학적 구도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국이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본격적인 보호무역·산업정책을 추진
  - AI 하이퍼스케일러가 혁신 성장의 주체가 되고, 연관 산업과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AI 신경제로의 재편 →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을 통해 AI발 공급망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상황으로, 국가 역량과 자원의 총 결집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

- 급격한 산업 재편·계층별 양극화·일자리 감소는 각 사회의 제도적·정책적 대응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 → 경제정책에 있어 소극적 부작위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며, 일각에서는 단순히 현 제도의 점진적·부분적 개량을 넘어 국가와 국민 간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내놓은 재정 측면의 대답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축약됨

⇒ 중점 심사 방향(안)

-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재정투자는 정부의 역할이 커짐을 의미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문의 비중 확대를 야기. 따라서, 우리 사회가 현 정세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에 따른 정부 역할 변화에 얼마나 동의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
  - 예를 들어, 국회가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신규사업인 한국전력공사 출자 5천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2,500억원을 심사할 때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위한 전력망 증설 및 용수 공급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얼마나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거시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

- 한편, 만약 국가적 역량과 자원의 결집이라는 큰 틀에서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더라도, '국가=정부', '정부=중앙정부'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중앙정부가 담당할 투자의 몫과 재량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도 세심하게 심사할 필요

●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번에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 역시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

- 특히 우리나라는 세수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국제적인 산업구조·공급망 변동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제도 마련은 차제에 반드시 우리 사회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할 이슈임
- 이 역시,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동 기금의 규모와 구성, 수입·지출구조, 운용방식,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는 치열한 분석과 논쟁, 합의의 영역으로 국회가 미래대응기금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

② 중간층 관점 (meso level) - 미래대응기금 및 재정 총량

❶ 미래대응기금

● 미래대응기금은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필요시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27년 총 조성규모 162.3조원, 그 중 지출 45.4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7년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12.5조원을 활용하고, 여유자금은 104.4조원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임

- 이 중 지출 45.4조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 청년 계정은 청년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형성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동력 계정은 프론티어급 AI 개발, 3대 메가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로 투자. 지방 계정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전남·광주 통합 지원금 신설이, 교육·인재 계정은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미래인재성장자금이 핵심 사업으로 보임

● 미래대응기금은 기존의 국가재정법상 기금과 여러 근본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금 신설보다는 재정제도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

-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각계의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에 의해 쟁점이 점차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요한 제도 신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논쟁

미래대응기금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약화 우려**

- 기금운용계획 변경 한도 30%, 초과세수의 세입세출 외 기금 전출(예산총계주의 예외),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에 한도가 없고 사후 보고만 규정

▨ **추가세수 산정 방식 및 세수추계 신뢰성**

- 세입예산 추계에 따라 기금 적립규모 변동, 현 추세치 산식은 자의적이라는 비판

▨ **기금 지출사업 구성의 문제**

-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단순 이전이 상당수, 기금 설치요건에 미부합, 기존 기금 및 정책수단과의 중복 문제, 일시적인 재원으로 다년도 지출

▨ **국채 상환이 아닌 기금 적립**

- 빚내서 적립하는 구조로 인한 역마진, 국채 조달금리 높은 상황에서 상환규모 불충분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규모 및 자율성**

-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교부세 증가 규모 미흡, 지방계정 배분 기준 및 자율성

◉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근간에는 재정 운용에 있어 (중앙)정부 역할·재량 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외에, 단일 제도에 '투자 플랫폼'과 '재정 안정화 장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데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고 보임. '미래대응기금' 명칭부터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와 여유자금의 적립이 필요하다는 양 측면의 문제의식이 녹아 있음

– 두 가지 차원을 나누어서 분석할 때 동 기금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대응기금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봄

(1)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의 성격:

– 2027년 30.4% 증가라는 전례 없는 총수입 확대에 대응함에 있어, 이를 단순히 단년도 총지출 확대 또는 국채 상환에 전액 활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문제의식 → 재정의 평탄화(smoothing) 필요성

*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9.11일, 경인사연·KDI 토론회): "세수 호조기의 재원을 적립하여 세수 불황기의 재정지출을 평탄화한다는 정책목표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접근"

– 또한, 내국세 수입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연동되는 경직적 구조의 문제점이 현 상황에서 더욱 부각 → 수백 조에 달하는 재정 수입을 국가 전체의 재원 재배분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

(2) 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성격:

– 부처·회계간 분절, 단년도 사업 중심의 기존 체계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다부처·융합형, 중장기적 재정투자를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 세입 확대기에 재정 '저수지'를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필요성에 기반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가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 합의된 기준은 없으나, 정부는 단순히 기술혁신 인프라나 R&D(성장동력 확충) – 전통적인 투자 개념 – 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청년(미래세대), 지역 균형성장,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인적자본 확충이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중점 심사 방향(안)

- (중앙)정부 역할·재량 확대 관련,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국가적 역량 결집 vs. 민주적 책임성에 기반한 재정 통제라는 두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를 심사·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금 변경 요건 및 국회 보고·심사 절차, 초과세수의 세입세출 외 기금전출, 세수추계 독립성·정밀성 확보 등 중점 점검

- 재정 안정화 및 투자 플랫폼 성격 관련, 한 제도 내 상이한 두 가지 성격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도를 심사·보완할 필요가 있음

  – (재정 안정화) 반도체 호황은 언제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으나, 특정 산업에 세수가 편중된 경제 구조상 세입의 급격한 변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 → 차제에 신설한 동 기금을 그간 제기된 문제점(기금 재원의 단기 고갈 우려, 일반회계 및 공자기금과의 관계 등)을 보완하면서 효과적인 재정 평탄화(smoothing) 장치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투자 플랫폼) 각 사업 계정별로 해당 사업들이 진정 미래 대응(잠재성장률 또는 총요소생산성 제고)이라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심사 중점. 더불어, 면밀한 사업 성과관리 계획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 지표도 일반적인 사업과 차별화되는 '총요소생산성 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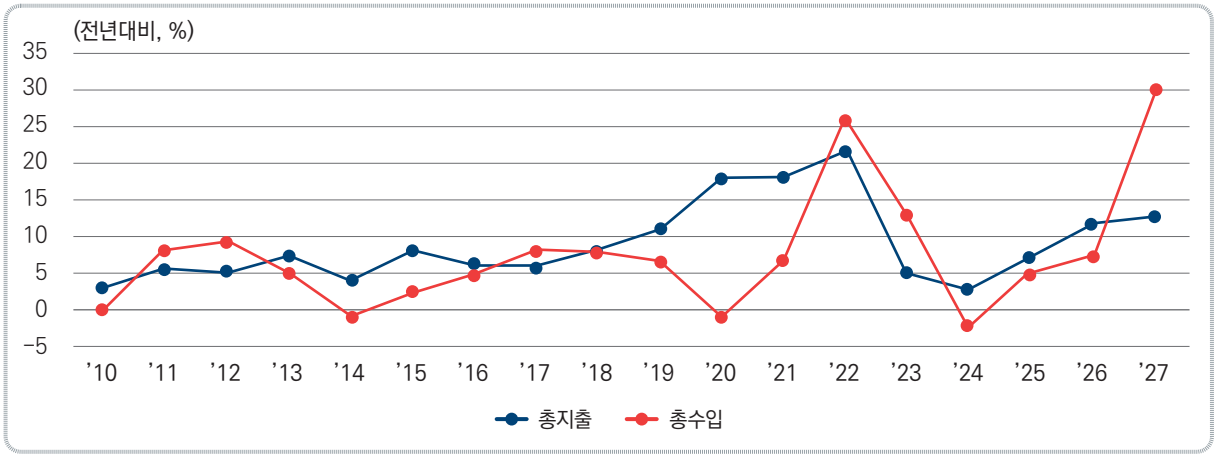
❷ 재정 총량

◉ 총량적 재정운용을 평가하기 위해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통합·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높은 총지출 증가율만으로 '과도한 확장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 2010년 이후 총수입·총지출 증가율을 시계열로 살펴보면, 상당 부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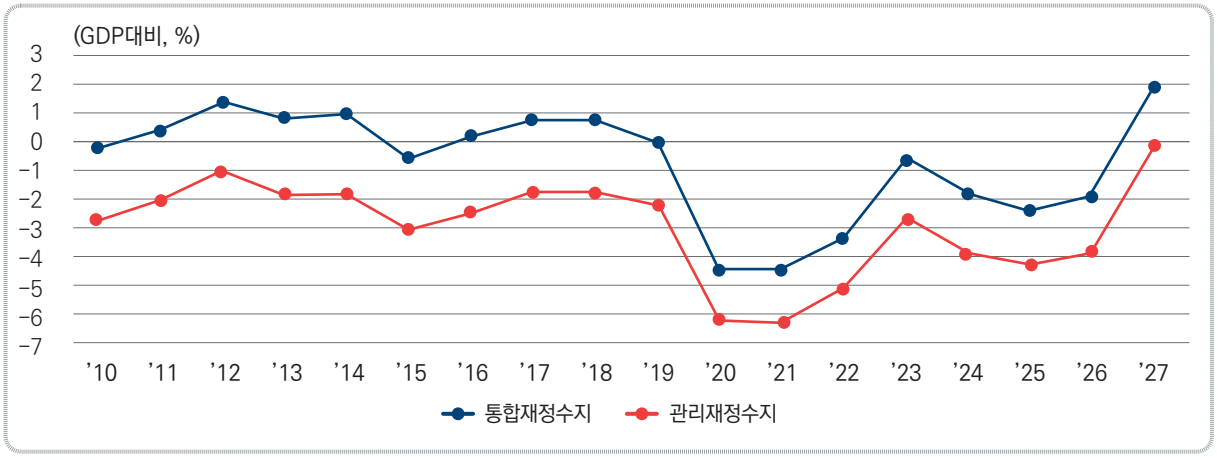
→ '27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12.8%)이 총수입 증가율(30.4%)을 크게 하회 (* 물론, 본예산만으로 단정하기는 곤란)

2010년 이후 총수입·총지출(전년도 본예산대비 %, 확정예산 기준)



- 통합·관리재정수지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19년 이후 첫 흑자(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도 '07년 이후 처음으로 균형 수준에 근접

2010년 이후 통합·관리재정수지(%, 확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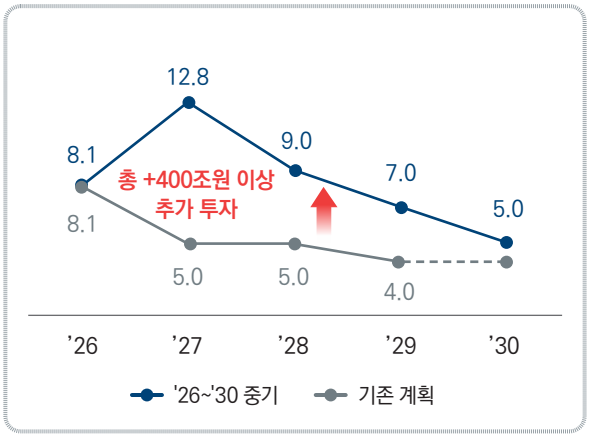


* '27년은 정부예산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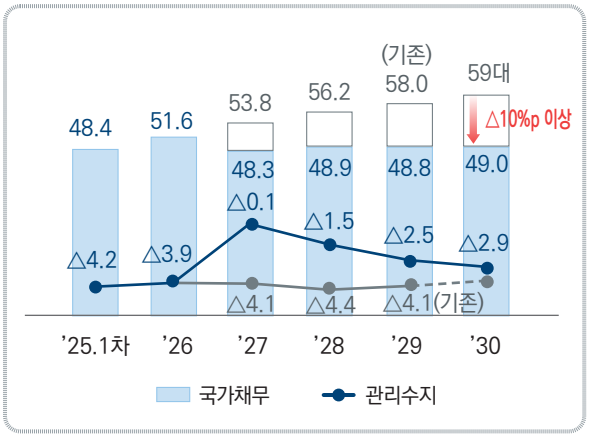
– 중기계획상 ’30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미만으로 관리

’26~’30 중기계획(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중기 총지출(%)



중기 국가채무·관리수지(GDP%)



* 출처: 2027년 예산안 기획예산처 홍보자료

⇒ 중점 심사 방향(안)

- 총수입 증가율(30.4%), 총지출 증가율(12.8%), 관리재정수지 비율(△0.1%), 국가채무비율(48.3%) 숫자로부터 읽을 수 있는 총량적 메시지는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보다는 ‘안정적인 거시재정관리 하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에 가깝다고 해석됨

  * 한국은행(’26.10월): ’27년 예산안은 성장률 0.5%p, 물가 0.06%p 인상 효과 전망

  – 다만, 향후 경기여건에 따라 추경 또는 대규모 기금변경 소요가 발생할 경우 현재 균형점에 맞추어 둔 거시재정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상존

③ 미시적 관점 (micro level) - 배분적 효율성

- 모든 예산심사에서 배분적 효율성은 강조되어야 하겠으나, 특히 현 거시 여건에서는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재정투자인지 여부에 더욱 초점을 맞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

⇒ 중점 심사 방향(안)

-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지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29.7%), 일반·지방행정(22.8%), 문화·체육·관광(20.4%) 순으로, 보건·복지·고용(9.3%), 환경(5.2%), SOC(4.0%) 분야는 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급증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상당 부분 기인 → AI 시대 국가경쟁력 확보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대규모·다수 신규사업 각각에 대한 실질적·절차적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은 면밀한 심사가 필요
  - 한편, 보건·복지·고용 분야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의무지출 소요 증가분이 제한적인 데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AI발 사회 변화에 대한 적기 대응의 핵심이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라는 점에서 현 제도의 지원 체계 및 수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교육 분야의 경우, 교부금 산식 개편 등에 따른 교육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 교부금이 전년대비 10% 이상 확대 편성되었음. 교육 분야 재정 개혁이 국가의 근간인 교육에 대한 홀대라는 잘못된 인상을 국민들께 주지 않도록 영유아·고등·평생 교육에 대해서도 더욱 과감한 투자로 양질의 교육 제공에 이바지할 필요
  - 한 가지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미래세대'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청년·청소년들이란 점 → 청년·청소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 자산 형성을 적극 뒷받침 해 미래 한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운용임

- 올해 정부예산안 단계부터 열린재정에 내역사업 단위까지, 그리고 AI 친화적인 형태로 사업설명서가 공개되어, 연구자와 일반국민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진 상황 → 특히, 2027년 예산안의 계층별·연령별·지역별 귀착에 대한 연구자들의 활발한 분석이 이루어져 진정한 재정 민주주의의 토대가 구축되기를 기대

2027

예산안 토론회

토 론 4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김 대 종

세종대학교 교수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김 대 종
세종대학교 교수

2027년 820조 슈퍼예산, 재정건전성과 부채상환에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에 기대는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국가채무 관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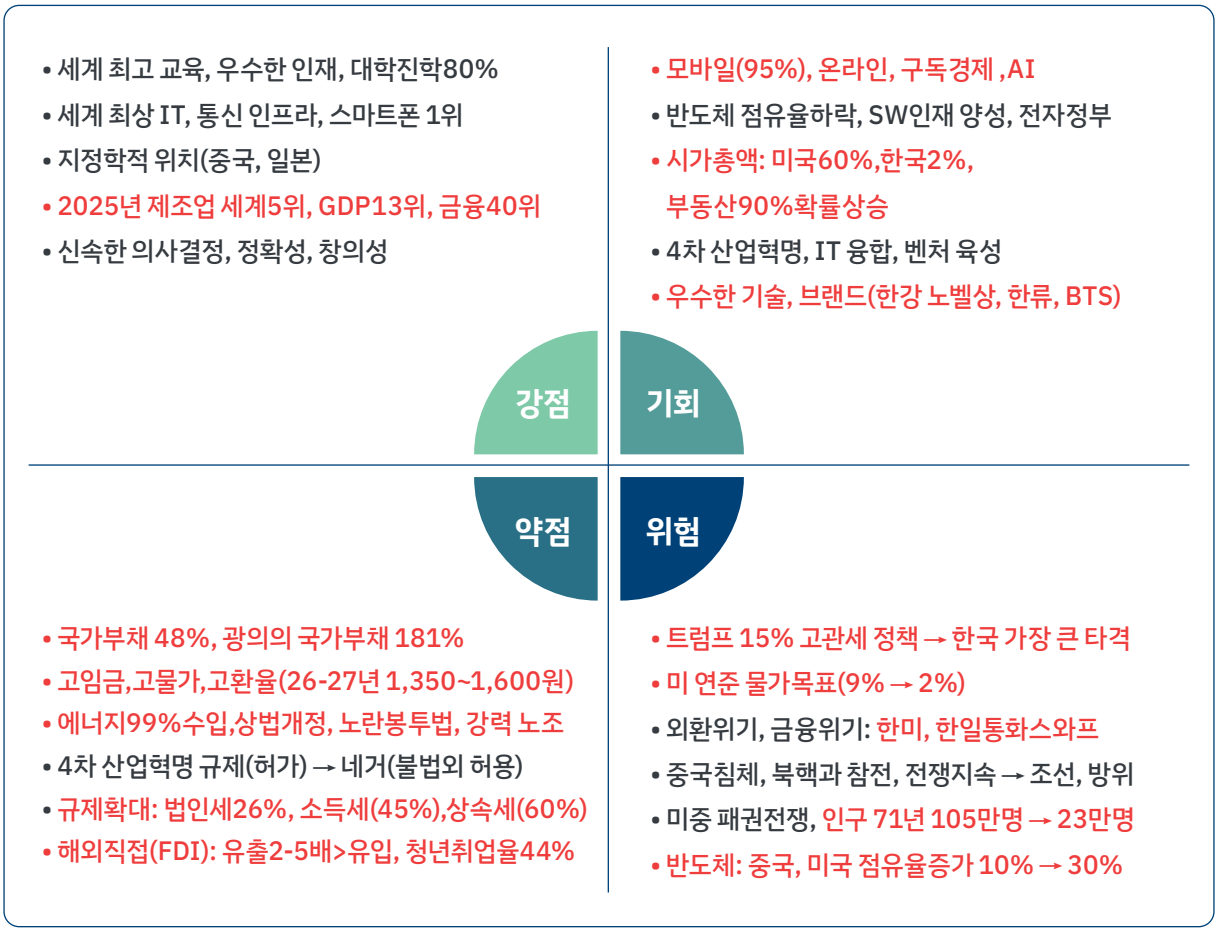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전망: 2026년 3.1%, 2027년 2.7%
- 국회 확대재정: 2026년 예산(728조,8.2%), 2027년 820.8조원(12.8%)
- 한미관세협정: 3,500억달러= 2,000억+1500억, 매년 200억 *10년
- 반도체 점유율 하락중: 80%->70%, 삼성, 하이닉스 주가 -40% 폭락
- 통계상 상승 확률: 서울집값89%, 전국집값 90%
- 한국 원화 사용 0.1%, 세계40위 → 국제금융 위기
- 외환보유고4,400억 달러, 95%미국채권 등 → 3500억 달러, 직접투자 전환(미국공장 건설)
- 원화경쟁력 세계40위권: IMF 국가부채 60% 위기, 한미·한일통화스와프 부재, 외환보유고 부족. 한국 광의 국가부채181%.
- IMF, 피치, 한국경고: 공기업 등 부채 포함시 한국 재정 매우 취약.
- 한국 통화량(돈) 국가 GDP 154%, 미국 통화량(돈): 국가GDP 71%
- 한국 노동생산성 34위/38

-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2027년 정부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돼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국가예산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2027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은 약 821조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2.8% 증가했다. 물가는 3.1%, 경제성장률은 3.2%, 기준금리 3.0%, 순수한 국채 국가채무 48%, 광의의 국가부채(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기업 부채)는 181% 정도다.

● 물가인상률을 네 배정도 초과하는 12%확대재정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2026년 GDP대비 통화량에서 한국 154%, 미국 71%다. 한국 통화량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한국 경제 SWOT



●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위해 기준금리를 3.0%로 두 번 연속하여 인상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년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명 정도로 창업자 90만 명을 압도하고 있다. 2026년 대학생 청년취업율은 44%다.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 2026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두 배 정도 많다. 외국기업은 한국의 강력한 노조, 노란봉투법, 세계평균 법인세 21%를 초과하는 한국 26% 높은 법인세, 4차 산업혁명 우버, 타다 신산업 금지 등으로 한국 투자를 줄이고 있다.

- 반면 한국 기업은 미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 기업은 계속 해외로 공장을 옮기게 되며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 2027년 추가 세수 중 100조 원 상당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추가 세수가 162.3조 원이 확보되고 예산상 수입총액이 2026년에 비해 205.6조 원이나 증가했다. 국가채무액은 2026년 1412.8조 원에서 2027년에는 1519.8조 원으로 편성되어 107조 원이 증대될 것이다.

2027년 재정운용 모습

(단위 : 조원, %)

	'26년		'27년 예산안(B)	증감(B-A)	%
	본예산(A)	추경			
◇ 총수입	675.2	700.6	880.8	+205.6	30.4
• 국세수입	390.2	415.4	584.4	+194.2	49.8
• 세외수입	285.0	285.2	296.4	+11.4	4.0
◇ 총지출	727.9	753.0	820.9	+93.0	12.8
• 예산	481.4	504.0	505.0	+23.7	4.9
• 기금	246.5	249.0	315.8	+69.4	28.2

- 2027년 국채이자비용은 42.8조 원으로 하루에 1172억 원이 이자로 지급된다. 예산상 수입총액이 205.6조나 증대하는 상황에서는 100조 원 이상 국가채무를 상환하여 2027년 국가채무액이 2026년 국가채무액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안이다.

- 여유자금 104.4조원을 쌓아두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예산편성이다. 미래 세대를 가장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후손들이 부담할 국가채무를 적게 물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2027년도 예산편성에서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

- 2027년 너무나 큰 재정지출 증가, 미래기금 신설 등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진정한 미래 대응은 국가 부채를 줄여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재정 대응이 가능하다. 106조원이나 예비로 준비하는 것보다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

- 경제학에서 구축효과(驅逐效果)가 있다. 정부가 과도하게 재정을 확대하면 민간경제가 위축된다.

▣ 2027년국가채무 1,519조원,48.3% → 늘어난 세금수입으로 부채상환해야 한다.

• **국가채무**(GDP 대비)는 전년대비 3.3%p 감소한 **48.3%**

(단위 : 조원, %)

	'26년		'27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	
◇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52.7 (△1.9)	△52.5 (△1.9)	59.9 (1.9)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107.8 (△3.9)	△107.6 (△3.8)	△3.1 (△0.1)
◇ 국가채무(GDP 대비)	1,413.8 (51.6)	1,412.8 (50.6)	1,519.8 (48.3)

- 정부 개입이 국민을 비롯한 기업 등 경제주체의 기대를 바꾼다는 부분이다. 기업들이 앞으로 정부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다.
- 그 결과 과거라면 존속가능하지 않은 모델이 새로 창업하고 유지되게 된다. 정부 개입이 구조적으로 비효율을 만들고 있다.
- 특히 R&D 분야는 예타 폐지 등으로 최근 미래 재정을 고민하지 않고 대형 사업이 각 부처별로 남발되고 있다. 통합 관리나 장기적 비전보다는 당장의 트렌드에만 맞춰서 장기 사업이 나와 우려가 된다.
- 정부 정책은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일시적 트렌드에 맞춘 정책은 실패하게 된다.

▣ **여유자금을 104조원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부채 상환해야 한다.**

- ('27년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12.5조원**

▣ **('27년 여유자금) 약 104.4조원 + &***

* '26.9월 세입재추계로 내국세 수입이 증가할 경우 '26년 증가분 추가 적립

- **정책적 필요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 가능**

-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확장재정 기조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지속적인 재정 확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반도체 경기가 언제까지 호황을 이어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한국의 반도체시장 점유율은 2026년 1월 80%에서 이미 70%로 하강하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주가는 최고가 대비 40% 하락하고 있다. 주가는 1년 뒤 기업의 실적을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한다. 주가하락과 점유률 하락을 감안해 정부는 2027년 예산을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둬야한다.

- 이미 한국 반도체를 구입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구매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부채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와 금융안정,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2027년 820조원으로 지출을 늘리는 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인상하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면 정부의 확대재정과 엇박자다.

-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6%가 넘는 고금리 부담은 기업과 가계에 돌아간다.

-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높은 금융비용과 경기 부진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엇박자 정책과 고금리 정책으로 수백만명이 서민들이 100%~16,000%에 이르는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2027년 예산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은 재정건전성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500조 원을 크게 넘어섰으며, 향후 고령화와 연금 지출,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 호남반도체 1.5조원 지출은 시기상조다.

- 호남반도체 800조원 지출은 人水電(에너지, 사람, 용수) 등 구체적 계획이 산출된 뒤 집행해야 한다.
- 3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기는 원자력 발전소 20기 정도다.
- 원자력 발전소 1개 건설에 10년이 소요된다.

▣ 반도체 생산에는 3대 필수조건: 人水電(사람 용수 전기)

- 5년째 지지부진한 용인 등: 1천억원
- 광주공항 호남반도체: 1조 5천억원(총 6조원) → 하이닉스 주가 폭락 -40%,
-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
  - (생산거점) 수도권·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가속화(0.4조원)
  - (수도권) 용인·평택 팹(Fab)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0.1조원)
  - (비수도권) 서남권 클러스터 신속한 착공('28~) 전폭 지원*

    * 서남권 반도체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적극 뒷받침(총 0.7조원, '27년 0.3조원)
- (투자기반) 신규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지원(1.5조원), 신규「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신설 등 안정적인 투자기반 구축

(단위: 억원)

	'26년	'27안	비고
-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	-	15,000	•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및 생태계구축 등 4년간 6조원 지원
- 반도체 핵심기술 R&D	4,612	5,466	• 화합물반도체R&D 상생팹 구축, K-AI 반도체 및 극미세·적층형 반도체 R&D 등

- 국가채무비율 50%가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단기적인 세수 증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6년 국가부채율은 순수한 국채는 50%정도이지만, 공기업과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현재 181% 정도다.

-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60%가 넘어서면 위험국가로 분류한다. 당초 2029년 순수한 국가부채가 6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반도체 특수로 연기되었을 뿐이다.

- 특히 2026년 반도체 산업에서 세금이 많이 걷히는 시기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모두 새로운 사업과 경상지출에 투입하면 경기가 하강할 때 재정을 활용할 여지가 줄어든다. 반도체 수출과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면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와 연금 등 필수 지출은 쉽게 줄이기 어렵다.

- 그 결과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의 반도체 경기와 재정 전망에 주목하고 있다. 피치사는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의지한 확대재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특정 산업의 호황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첫째, 정부는 예산 증가 속도를 경제성장률 3%과 물가 상승률 3% 등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2027년 예산역시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3% 정도로 조정하는 필요하다. 정부가 제출한 12%를 넘는 큰 폭의 지출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지 사업별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늘어난 세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다. 미래에 경기침체나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세대가 지출을 무리하게 늘리면 미래 세대가 더 큰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재정건전성은 성장정책의 반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1971년 105만 명이 태어났지만 2026년에는 25만 명 정도로 80%가 감소했다. 인구증가 예산을 대폭늘여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부채를 줄여야 한다.

- 둘째, 2027년 늘어나는 100조원 정도의 예산은 부채상환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이 수출과 세수를 견인하는 동안에도 유통업, 건설업, 자동차 부품업, 농업 등 여러 산업은 비용 상승과 소비 부진,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과 일부 수출산업의 성과가 전체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장의 지속 가능성은 약해진다.

- ‘9988’이라는 중요한 용어가 있다. 국내 전체기업99%는 중소기업이며 근로자 88%는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의미다. 전체근로자 2,900만명중 반도체 업종 근로자는 100만 명이 되지 않는다.

- 2026년 청년취업률이 44%다. 대학을 졸업한 56%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예산은 청년들이 전공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채용 부담을 낮추고 직업교육과 현장실습을 강화하며, 청년을 실제로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단순한 현금 지급보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확대, 경영 컨설팅, 인력 확보,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

- 창업보다 폐업이 늘어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건설업과 자동차 부품업 등 전통산업도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재정 지원의 기준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되어야 한다.

- 셋째, 160조원 미래대응기금과 각종 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미래 산업과 국가적 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출 목적과 사업 선정 기준, 성과 평가, 사후 감사가 더욱 중요해진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라면 일반회계와 기금 모두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 특히 대규모 기금을 통해 장기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별 예산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중복 투자와 부실 사업을 방지해야 한다. 미래대응이라는 이름만으로 재정 지출의 타당성 검증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기금의 운용 계획과 결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정부는 사업별 목표와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투명한 재정 운용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출발점이다.

- 넷째, 반도체 이후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반도체기업은 시장점유유률은 80%에서 70%로 감소하고 있다.

-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AI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 확대와 기술 변화, 경쟁국의 투자에 따라 가격과 시장점유율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점유율에서 미국 마이크론 20%과 중국 창신메모리 10% 등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발전도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큰 위협이다. 반도체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한 재정 계획은 위험하다.

- 정부는 반도체와 AI뿐 아니라 자동차, 바이오, 조선, 방산, 첨단소재, 농업, 유통업 등 다양한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 규제 개선,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에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모든 산업의 승자를 직접 결정하기보다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 경쟁이 작동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다섯째,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38개국 중 34위다. 근로자들이 몰입하고 집중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AI와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확대하며, 청년들이 첨단기술을 배우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 교육과 직업교육을 산업 수요에 맞추고, 중소기업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2027년 예산의 핵심은 지출 규모 자체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쓰고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있다. 재정은 한정된 국가 자원이며, 오늘의 지출은 미래 세대의 부담과 직결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모두 소비하기보다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며,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

-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려면 호황기에 위기를 준비하고, 불황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만 집중하지 말고 국가채무와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 고려하는 책임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청년과 기업,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것, 이것이 2027년 대한민국 예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단위 : 조원, %)

구분	'26년 본예산(A)	'27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총지출	727.9	820.9	93.0	12.8
1. 보건·복지·고용*	264.4	289.0	24.6	9.3
(구 기준)	(269.1)	(293.9)	(24.8)	(9.2)
2. 교육	99.9	110.7	10.8	10.8
(교부금 제외)	(28.3)	(31.9)	(3.6)	(12.8)
3. 문화·체육·관광	9.6	11.6	2.0	20.4
4. 환경	13.9	14.6	0.7	5.2
5. R&D	35.5	39.5	4.0	11.2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8	41.2	9.4	29.7
7. SOC	27.7	28.9	1.2	4.0
8. 농림·수산·식품	28.0	30.7	2.7	9.5
9. 국방*	67.7	73.3	5.6	8.2
(구 기준)	(65.9)	(71.8)	(5.9)	(9.0)
10. 외교·통일	7.0	7.1	0.1	1.1
11. 공공질서·안전	27.3	28.8	1.5	5.3
12. 일반·지방행정	121.4	149.0	27.6	22.8
(교부세 제외)	(52.0)	(71.8)	(19.8)	(38.1)

*** 통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군인연금기금을 보건·복지·고용분야에서 국방분야로 이관하고, 국방분야 지출액은 일반회계 총계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개편**

▣ 미래대응기금 신설

▣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 + 필요시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

▣ ('27년 수입안) 162.3조원

-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15~'25년 6.2%)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적립

▣ "청년 공공임대주택 10.6만호 공급" 9.4 → 18.1조원

- 임대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기 집을 가지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 국민주거형태: 아파트 65%, 주택 20%, 빌라15%
  - 아파트 구매에 대한 청년지원 필요하다.
- '27년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26년보다 3.5만호 확대하여 10.6만호를 공급하고, '30년까지 총 45만호+&를 우선 지원
  - 역세권 입지, 넓은 평수의 신규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 (내집마련) 월세 수준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신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하고,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청약기회 확대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非아파트(4억원) 구매시 우대금리 지원(최대△2.1%), 생애최초 혜택 유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 & 7천만원 이하로 확대

(단위: 억원)

	'26년	'27안	비고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	38,300	• 청년선호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 청년월세 지원	1,300	2,319	• 소득요건 기준중위 60&100% 확대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597	• 금리 인하 위한 이차보전 지원

발간일 2026년 11월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6

2027
예산안 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